



12년

전북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댄스) 개최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음 4월 22일) 제3744호

대표전화 (063)288-9700

이재명 “전북, 국가균형발전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주 찾아 집중유세… 지방국립대 집중 지원
에너지 공유 모델·산업구조 지방 중심 재편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노력 등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전주를 찾아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수백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전주 유세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전주 시민들에게 25분여간 명연설을 통해 청중들의 연호와 수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앞 구정문 입구는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수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이 후보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모두 연설에서 이 후보는 “전북은 동학혁명의 발상지로 비록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결국 그 영령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전북을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늘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전북 도민들이 이제는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수도권 중심 국정 운영을 “장남 뽕빵식”이라 표현하며, “국가의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이 성장하면 지방도 좋아진다고 했지만, 현실은 수도권은 포화되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토 균형 발전의 구체적 전략으로 ‘지방국립대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대 학생에 비해 지방대 학생들은 국비 지원액이 그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통해 전북대 등 지방대학을 ‘지역의 인재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지역을 키운다”며, 교육 격차 해소 없이는 지역 발전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의 지역 여건에 맞춘 산업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

다. “전북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최적화된 지역”이라며, “전북 서해안과 고창, 부안, 새만금 등을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공유 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들었다. “신안에서는 주민이 발전 수익의 30% 이상을 배당 받고 있다. 이 모델을 전북에도 적용하면 주민 소득도 늘고,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력 생산자인 전북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송전 비용은 생산지가 부담하고, 수도권에 쏠려 간다”며, “이는 정의롭지 않다. 전기 요금 체계를 바꿔, 전북 등 생산지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 요금이 싸면 기업도 지방으로 온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은 더 살아날 수 있다”며,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정책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외에도 전북이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 분야로 문화와 첨단 기술을 꼽았다. 그는 “전주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푸드와 K-컬처의 중심지”라며, “여기에 AI,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도 더하면, 전북은 다시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예산과 제도를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 후보는 또한 전북이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지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며 누구와 같이 부산 엑스포처럼 되지 않겠다고 밝혀 청중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연설 말미에 이 후보는 “이재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6일 전북대학교 후문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재명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부채(합축선)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구일 뿐”이라며, “진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번 대선에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북에서 시작된 균형 발전 대장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지방의 삶이 바뀌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뀐다. 함께 미래를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유세는 단순한 선거 유세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이 후보의 비전을 설명하는 기조연설 성격도 띠었다.

이재명 후보는 연설을 마치고 전북대 교내에 있는 이세종 열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한 후 정읍으로 유세를 떠났다.

정읍 유세에서 이 후보는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부서지면 조선은, 나

라가 없다”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나라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최대한 좋은 후보를 뽑아줄 것”이라고 정읍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익산과 군산에서 유세를 벌였다.

익산 유세 현장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삼욱 무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라고 치켜세웠고, 이 후보는 김 의원에게 “민주당에 입당해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달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군산 구 시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군산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만호 기자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북 기념식 및 추모식'이 열린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비 일원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북 기념·추모식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5월의 그날을 잊지 않고 항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최초의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를 기리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5·18민주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이날 전북대학교 이세종 광장에서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 45주년 전북 기념식과 이세종 열사 45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추모식에는 유창희도 정무수석, 서거석 교육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및 이세종 열사 소개 영상 시청, 이세종 열사 장학금 수여, 45년 전 현장에서 있었던 이들의 5월 정신 퍼포먼스, 헌화, 문화공

연 등도 함께 진행됐다.

이세종 열사는 1959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79학번으로 전북대학교 농학과에 진학했다. 이 열사는 1980년 5월17일 밤 동료 학우들과 함께 ‘계엄 철폐, 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었다. 다음 날인 5월18일 이 열사는 학생회관 앞에서 피켓이 가득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최초 그의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으나 지난 1993년 시신을 검안한 이동근 교수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제기 등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후 여러 조사 끝에 지난해 3월13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이 열사가 숨진 지 44년이 지난 두 그가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임이 세상에 밝혀졌다. /뉴스

도,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기업유치 ‘속도’

이차전지 등 3개 기업과 총 280억 규모 투자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유망기업 3곳과 총 28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기업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주)에스아이머티리얼즈(5월 12일), (주)건국테크(5월 14일), (주)위드이엘(5월 16일)과 각각 투자협약을 맺고, 익산시·완주군·정읍시 등 해당 시군과 함께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정착과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이번 협약은 △이차전지용 고순도 실리콘 분말 △버섯·대형트럭 조립 부품 △반도체를 기능성 사료 등 첨단 산업과 신시장 분야에서 고르게 이뤄져, 전북 산업 지형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은 협약 기업에 대해 인적·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지역 인력과 자재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도내 기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1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